

Today's News Clip

#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7월 13일 목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목 차

江原日報	21면	[동정] 권혁열 도의장	1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권혁열 도의장. 심오섭 도의원	1
江原日報	03면	박정하 “자치도·원주 예산 확보 최선”	1
강원도민일보	12면	국힘 원주 갑 당원연수서 '총선 필승 다짐'	2
MBC 강원영동	온라인	"전력 직거래로 지역 발전소와 업체 부담 줄여야"	3
KBS 원주	온라인	강원도의회 '지역상당소' 논란 확산...다른 시도 비교 검증	4
춘천MBC	온라인	강원특별법, 여전히 과제 많다[1/3]	5
江原日報	03면	“양질의 일자리 개발해 어르신 행복도시 조성”	7
江原日報	03면	“특별법 3차 개정안 폐광지·교육특례 담아야”	7
江原日報	03면	‘고령친화도시’ 머리 맞댄 자치도의원들	8
강원도민일보	22면	도의회 고령친화도시 연구회 창립	8
강원도민일보	03면	"망상 동해이씨티 사업자격 박탈, 취소송 철저히 대비해야"	9
江原日報	03면	동자청장 “연말까지 착공 성과 보이겠다”	9
江原日報	15면	"가리왕산 국가정원 특례 반영해야"	10
강원도민일보	13면	[동정] 심오섭(강릉) 도의회 사회문화위 부위원장	11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심오섭.원제용 강원특별자치도의원	11
강원도민일보	04면	도내 대학 3곳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확정	12
江原日報	01면	지방소멸 가속화에 '범도민 인구 증가 대책위' 추진	12
강원도민일보	01면	투자선도지구 지정 광역지자체 내·외부 경쟁 치열	13
강원도민일보	02면	기재부 방문한 김 지사, 국비지원 요청	13
강원도민일보	02면	부동산 침체에 강원도 세수 비상... 지방세 1225억원 감소	14
강원도민일보	02면	도, 미활용 도로재산 매각 "1200억원 확보 예상"	14
강원도민일보	04면	양양 포매리 주민 "마을 갈라놓는 동해북부선 노선 반대"	15
江原日報	05면	집중호우 2주새 4건 '싱크홀 주의보'	16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삼척원전 재추진 안 된다	17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문화원장 선거 개인명예 넘어서야	18
江原日報	19면	[사설] 150만명 붕괴 위기, '新공간전략'으로 대전환해야	19



# 江原日報

2023 07 13 ( )  
21

◇권혁열도의회장은 13일 오후 7시30분 강릉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 폐막식에 참석.



# 江原日報

2023 07 12 ( )

## [동정]권혁열 도의장.심오섭 도의원

권혁열 도의장.심오섭(강릉) 도의원은 13일 오후 7시30분 강릉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3 강릉세계합창대회' 폐막식에 참석.

# 江原日報

2023 07 13 ( )  
03

## 박정하 “자치도·원주 예산 확보 최선”

### 국민의힘 원주갑 당원 연수회

국민의힘 원주갑 당협위원회 주관 당원 연수회가 12일 원주문화원에서 열렸다. 이날 박정하 국회의원(사진)은 “2020년 당협위원장을 맡을 당시 책임당원 500여명, 일반당원 8,000명에서 3년여가 지난 현재 각각 3,000명과 1만2,000명으로 늘었다”며 “지난해 백수(白壽)를 넘겼음에도 보수층에 힘을 보태주는 김택수 어르신을 고문으로 맞이하는 등 지역 인사들이 속속 당원으로 입당 또는 복당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도당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고, 국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합류하게 됐다”며 “원주와 강원자치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팩트 체크 영상 상영에 이어 최고령 당원인 김택수씨와 권영익 전 시의원, 한창진 전 문막농협조합장 등 4명의 입당 환영식, 당직자 37명에 대한 임명장 전달식 등이 진행됐다. 박 의원과 원주수 원주시장, 윤미경 도당 사무처장,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시·도의원, 당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허남윤기자

## 강원도민일보

2023 07 13 ( )  
12



박정하 의원이 주최한 국민의힘 원주갑 당원협의회  
회당원연수가 12일 원주문화원에서 열렸다.

### 국힘 원주 갑 당원연수서 '총선 필수 다짐'

국민의힘 원주 갑 당원협의회가 12일 원주문화원에서 당원 연수를 갖고 당심을 결집하며 오는 총선 필수 의지를 다졌다. 이번 당원 연수에는 당협위원장인 박정하(원주 갑) 국회의원, 원강수 시장,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당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당원 결속은 물론 강원도 입당자 중 최고령인 1923년생의 김택수 어르신과 권영익 전 시의원, 한창진 전 문막농협조합장 등 총 4명의 입당 환영식도 마련됐다. 원강수 시장은 "온갖 유언비어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당원들이 중심을 잡고 넘어지지 않는 오투기처럼 역할을 다해달라"고 격려했다. 박정하 국회의원은 "원주 발전을 위해 모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모두와 함께 내년 총선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권혜민

2023 07 12 ( )

MBC 강원영동

## "전력 직거래로 지역 발전소와 업체 부담 줄여야"

홍한표



최재석 강원도의회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공포에 따라  
지역의 전력 직거래제와 요금 차등화제 등을  
도입하자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제32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전의 전기요금에는 막대한 송전선로 건설 등  
시설 조성 비용이 포함돼 있고,  
지역의 업체들은 값비싼 전기료를 쓰는 만큼  
비용을 아끼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에 밀집한 발전소에서  
지역 업체들로 전력을 직거래한다면  
보다 저렴하게 전기 이용이 가능하다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공포된만큼  
강원도가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3 07 12 ( )



## 강원도의회 '지역상담소' 논란 확산...다른 시도 비교 검증



[앵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 상담소'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까지 나서 상담소 설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무엇보다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다른 시도와 비교해봤습니다.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국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현재 지역에 민원 상담소를 운영하는 곳은 경기도와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3곳입니다.

이제 시범 운영을 시작한 경남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곳의 올해 상반기 상담소별 상담 건수는 경기도는 월평균 9건, 충남은 월평균 4건입니다.

특히, 충남 청양의 경우, 올해 상반기 180일 동안 상담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해당 의회들은 건수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지방의회 직원 : "그곳(상담소)을 방문해서 자기 민원을 해결했을 때에는 그분에게는 그 한 건이 굉장히 큰 사항이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를 본 세종시와 전라남도의회는 상담소를 설치하려다 중단했습니다.

[지방의회 직원/음성변조 : "충남이나 경기도를 보니, 그게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용객이 많이 줄 것 같으니까 저희가 폐기를 했죠. 의원님들이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구나."]

예산도 부담입니다.

상담소 1곳당 운영 예산은 경기도는 연간 4,100만 원, 충남은 2,500만 원 정돕니다.

경남은 예산이 아예 없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상담소 1곳당 예산을 연간 4,8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충남은 상담소를 시간제로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최소화했고, 경남은 도청 2청사에 인력 배치 없이 사무실만 하나 마련했습니다.

반면, 강원은 사무실 임대는 물론 별도의 인력까지 채용하려다보니, 예산이 경기도의회 수준이 됐습니다.

[양선재/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장 : "시군청에 충분히 그렇게 협조를 구하면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본인들이 직접 지역민들을 만나셔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 강원도의회도 시민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상담소의 실효성부터 운영 방안까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송승룡

2023 07 12 ( )

춘천MBC

## 강원특별법, 여전히 과제 많다

### ◀ A N C ▶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핵심인 강원특별법도 개정 됐는데요, 앞으로 강원도 입맛에 맞게 강원특별법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고, 추가 특례도 반영해야 해 해결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 V C R ▶

4대 규제 완화와 미래 산업 근거를 담은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 이 법안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실제 효력을 갖는 건 내년 6월 8일 이후입니다. 강원도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이 법의 시행령을 제정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지 전용을 허가할 때 산지의 경사도와 표고 기준을 시행령에 담아야 하는데, 이런 시행령의 제정은 정부 부처 권한이라 또다시 강원도가 정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강원도가 꼽은 주요 시행령은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과 농지와 환경 특례 존속 기한 평가 방법 등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 ◀ I N T ▶

[박용식/강원도 특별자치국장]  
"내년 6월 7일까지 시행령이 개정돼야 합니다. 우선은 시행령에 강원도가 유리하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부처와 협의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 특례도  
특별법 3차 개정안에 담아야 합니다.  
특히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특례여야 한다며 제주도처럼 강원도에  
국제학교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 I N T ▶

[문관현/강원도의원]

"국제학교 설립도 다음 특례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I N T ▶

[박용식/강원도 특별자치국장]

"3차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육에 관한 특례,  
국제학교를 가져와야 합니다."  
외국인들의 이민 특례도 거론됐습니다.

◀ I N T ▶

[최승순/강원도의원]

"이제는 출생보다 사망이  
두 배 정도 강원도 같은 경우는  
차이내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민을 적극 활성화하고  
정책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 I N T ▶

[박용식/강원도 특별자치국장]

"이민 중요합니다. 전라북도특별법에  
그 중에 이민 특례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고..."

강원도는 도의회와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워킹 그룹을  
만들어 다양한 특례 발굴과 함께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막 첫삽을 뜬 강원특별법,  
완성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E N D ▶

(영상취재/최정현)

#강원특별법3차개정 #강원특별법 시행령

## 江原日報

2023 07 13 ( )  
03

### “양질의 일자리 개발해 어르신 행복도시 조성” 자치도의회 연구회 창립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연구회가 1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회장은 박윤미(원주) 도의원, 간사는 이지영(비례) 도의원이 맡았고, 최승순(강릉)·유순옥(비례)·최종수(평창)·진종호(양양)·이한영(태백)·박찬홍(춘천)·지광천(평창)·최규만(횡성)·이영욱(홍천)·이승진(비례) 도의원이 회원으로 활동한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개발과 함께 청년들과 상생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박윤미 연구회장은 “함께 공부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 江原日報

2023 07 13 ( )  
03

### “특별법 3차 개정안 폐광지·교육특례 담아야”

#### 기행위 특별자치국 업무보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12일 개최한 제2차 회의에서 강원특별법에 대한 도의원들의 주문이 잇따랐다. 이날 강원특별자치국 추진업무 상황보고에서 의원들은 속도감 있게 시행령 제정을 추진해줄 것과 함께 구체적인 특례가 3차 개정안에 담기기를 요청했다.

김길수(국민의힘·영월)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이 법령에 들어갈 수 없는 만큼 시행령에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승순(국민의힘·강릉) 의

원은 폐광지역 관련 특례, 문관현(국민의힘·태백) 의원은 교육특례가 3차 특별법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류인출(더불어민주당·원주) 의원은 수질오염총량제 특례, 또 임미선(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여성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원 정수 관련 특례를 강조했다.

박용식 도 강원특별자치국장은 “시행령 제정은 내년 6월8일 이전에 끝내야 하는 상황으로 3월 말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14일 실·국별 시행령 제정 계획에 대해 점검하고 다음 주 실·국장 대책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현정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연구회 창립총회

2023. 7. 12.(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고령친화도시’ 머리 맞댄 자치도의원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고령친화도시 연구회는 12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박운미 회장을 비롯한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가졌다. 박승선기자 lyano@kwnews.co.kr

## 강원도민일보

2023 07 13 ( )  
22



도의회 고령친화도시 연구회 창립 제11대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고령친화도시 연구회’(회장 박운미,간사이지영)가 12일 도의회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 강원도민일보

## “망상 동해이씨티 사업자격 박탈, 취소송 철저히 대비해야”

도의회 “철차 영키면 도가 손해”  
동자청장 취소사유 타당성 강조  
내일 도청 청문회 이의제기 청취



진종호 김기홍 강정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동해 망상 1지구 사업자인 동해이씨티의 사업자격 박탈 절차를 밟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사업자 측의 취소 소송 가능성을 따져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진종호(양양) 의원은 12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에서 “사업자 지정 취소 결정을 해도 사업자는

지정취소에 대한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텐데, 경찰 수사에 따른 사법조치가 (사업자 취소에) 더 빠르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에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사업부지) 경매 과정을 지켜

보려고 했지만, 계속 절차가 연기됐다”며 “동해이씨티 남현기 대표 재판, 법원 경매 과정을 고려할 때, 사업자 지정취소에 유리한 조건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김기홍(원주) 의원 역시 “소송이 두려워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도 “부지 경매는 이뤄졌다고 해도 취소 소송과 절차가 영키면 도가 손해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에 심정장은 “사업자 지정취소의 내용이 사실인지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취소 사유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경제자유구역법(제8조의5)에 따라

면, 사업시행자가 거짓 등으로 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 매수가 지연된 경우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를 취소할 수 있다.

동자청은 지난달 15일 동해이씨티에 사업자 지정 취소를 사전 통지한 뒤, 동해이씨티의 이의제기 등을 듣는 청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청문은 오는 14일 오후 2시 도청에서 열린다.

동해이씨티 소유 부지의 법원 경매 매각 기일은 오는 24일이다.

심영섭 청장은 이날 “경자청이 지난 9일 개청 10주년이었지만, 행사의 가

치를 느끼지 못했다”며 “10년 동안 사업을 못하다가, 새롭게 하러니 이분들(사업자)이 손을 놓고 있어 답답하다. 이번에는 사업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산림환경국 업무보고에선 최근 5년간 도 산림소득과장을 담당했던 행정 4급 직원의 재직 기간이 2개월, 5개월, 7개월 등 단기간 점을 지적했다.

강정호(속초) 의원은 “행정직 공무원들이 잠깐 왔다 가는 자리밖에 안 된다”며 “적어도 1~2년은 있으면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설화 lof@kado.net

# 江原日報

## 동자청장 “연말까지 착공 성과 보이겠다”

자치도의회 경제위 업무보고  
망상지구 비리의혹 집중 질의

속보=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압수수색을 받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본보 12일자 1면 등 보도)에 망상지구 개발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12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망상 1지구 개발사업 비리의혹



진종호 의원 박대현 의원 심영섭 동자청장

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심영섭 동자청장은 과오를 딛고 성과를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진종호(국민의힘·양양) 의원은 “개발업자들이 (소유부지에 대한) 경매도 교묘하게 시간 끌기를 하는 중이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결정을 한다고 해도 또다시 지정 취소에 대한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며 “법적 싸움을 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인데 국가수사본부에서 혐의가 확인된다면 사법 조치를 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고 했다.

심 청장은 “경매를 지켜보고 있던 중이었으나 계속 연기됐고 동자청에서 경매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지

정 취소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 가고 있다”며 “국가수사본부에서 사업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한 보충조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했고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당시 담

당자들이 저장됐던 메모리를 삭제하고 그만뒀기 때문에 포렌식을 통해 여러 부분이 사실로 인정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차후 망상1지구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박대현(국민의힘·화천) 의원은 “잘못한 사람이 따로 있고 수습하는 사람 따로 있다고 보인다”며 “결국 우리가 관심이 부족했다. 추후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 청장은 “망상 1지구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2, 3지구는 빠르면 올 연말 착공 등의 성과를 내도록 직원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2023 07 13 ( )

15

# 江原日報

## “가리왕산 국가정원 특례 반영해야”

### 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

#### 최승준 정선군수 건의 부지사 “글로벌 도시 실현”

【정선】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정선군이 지역 최대 현안인 3대 정책 과제를 특별자치도 특례에 반영해 3차 개정안에는 반드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정선군은 12일 정선문화예술회관에서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최승준 정선군수와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배왕섭 정선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박용식 특별자치국장, 전영록 가리왕산올림픽국가정원 범국민추진위원장, 정선군 기관·사회단체, 정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설명회가 12일 정선문화예술회관에서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최승준 정선군수,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배왕섭 정선군의회 부의장과 군의원, 정선군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선군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원홍식 정선부군수는 3대 정책과제를 설명하며 2018동계올림픽 이후 훼손된 자연환경을 합리적으로 복원하고 1조5,714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5,433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선군의 신성장동력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유치에 대한 합리성과 당위성을 피력했다. 또 광역교통망 개선

을 위해 동서6축 고속도로, 남북9축 고속도로, 태백선 준고속열차 EMU-150 조기 도입, 경강선과 정선선의 연결의 필요성과 강원랜드의 매출총량제, 출입일수, 이용시간 제한 등 각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폐광지역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건의했다.

정광열 부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주요 현안인 전국 최초

로 재정준칙 도입, 동서고속철도 착공과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 대상 선정 등 시통팔달 인프라 구축, 환경과 개발의 조화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최승준 군수는 “강원특별법 개정에 정선군의 3대 현안 사업이 특례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인구 소멸과 지역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인 지금 정선군의 향후 100년을 위해 4만명 정선군민과 하나 된 마음으로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광열 부지사는 “628년만에 특별자치도가 됐고 이는 강원도의 발전이라는 집을 짓기 위한 좋은 장비를 받은 것 정도이며 아직 정비하고 갖춰야 할 것이 많다”며 “앞으로 법 개정은 계속되며 자치조직과 재정권, 교육특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석기자

## 강원도민일보

2023 07 13 ( )  
13



심오섭(강릉) 도의회 사회문화위 부위원장은 13

일 오후 5시 30분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 컨벤션에서 열리는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 폐막

리셉션에 참석한다.

2023 07 12 ( )

## 江原日報

### [동정] 심오섭·원제용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심오섭(강릉)·원제용(원주) 도의원은 13일 오후 7시30분 강릉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 폐막식에 참석.

# 강원도민일보

## 도내 대학 3곳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확정

### 10월 실행계획서 제출 준비 박차

속보=정부가 지방대학 한 곳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벌대학 30 사업(본지 6월 21일자 1면 등) 예비지정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당초 발표대로 강원대·강릉원주대, 연세대 미래, 한림대 등 3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오는 10월 말 최종 선정 대학을 발표한다.

12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확정 및 본지정 평가 일정'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달 20일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한 후 지난 달 말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했다. 1개 대학이 이의신청을 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개최, 이의신청 1건에 대해 각각 결정을 내렸다.

예비지정대학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의 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교육부는 오는 8월 초 공동연수를 진행하고, 9월 중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각 대

학의 실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모형을 제시한 강원대-강릉원주대를 비롯해 연세대 미래, 한림대 등 예비지정 대학 15곳은 오는 10월 6일까지 대학구성원, 지자체, 지역산업계 등과 함께 실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예비지정과 별개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본지정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실행계획서 제출 일자가 정해지면 예비지정된 도내 대학들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강원1도1국립대' 모델을 추진 중인 강원대는 오는 14일 교수회·총학생회·직원협의회와 만나 1도1국립대 추진을 위한 구성원 의견 수렴과 동의 절차, 투표참여대상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AI교육 기반 창의 융합인재 양성하는 열린대학'을 비전으로 제시한 한림대는 부총장 주도로 새로운 TF팀을 구성 중이며, 연세대 미래도 '데이터 중심의 의료-AI 산학융합지구 구축'이라는 비전에 맞춰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정민엽

# 江原日報

## 지방소멸 가속화에 '범도민 인구 증가 대책위' 추진

### 도내 인구 12년 만에 최저치 도 이르면 8월 종합대책 마련

속보=강원특별자치도가 도지사 직속의 '범도민 인구증가 대책위원회'를 꾸린다. 지방소멸의 가속화 우려 속에 도내 인구역시 12년 만에 최저치(본보 12일자 1면 보도)를 기록하는 등 인구정책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인구 200만 달성(생활인구 포함)은 민선 8기 김진태 도정의 최우선 목표라는 점에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강원자치도는 이르면 다음 달 중 늦어도 9월 초까지 강원지역 인구감소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을 토대로 9월 중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범도민 인구증가 대책위'를 구성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도 교육감과 18개 시장·군수, 사회·민간단체를 총망라하는 인구정책의 최상위 실행기구가 될 전망이다.

범도민 대책위는 행정과 민간이 협업할 수 있는 인구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시민운동, 캠페인 등으로 활동을 확산시

켜 나간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 18개 시·군, 강원대, 한림대,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등은 이미 지난달 인구소멸 대응 추진단 실무회의를 열고 인구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는 일자리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학교소멸 방지대책, 위케이션 시범도시 조성,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의 자율성 확대, 외국인 대학생 체류 보증 유예 및 면제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최기영기자

# 강원도민일보

2023 07 13 ( )

01

## 투자선도지구 지정 광역지자체 내·외부 경쟁 치열

### 7개 도 중 4개 사업 결정 예정

동해·횡성·양구·인제·양양

도내 6개 사업비 총 7568억원

서면평가 통과, 이달말 결과 발표

김진태 지사, 균형발전 강조

지역별 성장사업에 최대 100억원을 지원... 7월말 또는 8월 초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7개 도(道) 단위 광역지자체의 우선순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 결과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발표될 정부 공모사업이라는 점에서, 도는 최다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와 관련, 김진태 도지사는 12일 국토교통부를 찾아 투자선도지구 사업 신청을 낸 동해시(목호항 재창조·무릉별유천지 관광자원화 투자선도지구), 횡성군(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양구군(양구역세권 스포츠행정타운), 인제군(인제역세권), 양양군

(양양역세권) 사업에 대한 투자선도지구 지정 당위성을 적극 피력했다. 이들 지역은 서면평가를 통과했으며, 삼척과 철원, 고성은 서면평가에서 고배를 마셨다.

투자선도지구 지정은 전국 4개 내외 사업만 결정되며, 종합평가는 오는 19일이다.

서면평가를 통과한 도내 지자체는 동해시(2개), 횡성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등 5개 지역 6개 사업이다. 최종 선정 규모는 전국 4개 사업 내외라는 점에서 도내 지역간 내부 경쟁에 더해 타 지자체간 외부 경쟁까지 치열하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최대 100억원의 지원과 함께 용적률·건폐율 완화, 인허가의제 등 규제 특례를 복합 제공해 민간투자 활성화와 함께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도내 5개 지역 6개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총 7568억원(국비 1781억·지방비 2994억·민자 2793억)으로 추산됐다.

김 지사는 이날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에게 "강원도 각 시군이 신청한 투자선도 지구는 지역 균형발전과 연계돼 있다. 잘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 실장은 "신청 사업들이 구성이 잘 된 것

같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투자선도지구 신청 사업 중 최대 규모는 횡성군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2870억원)다. 모빌리티 관광 문화 복합단지, 이모빌리티 산업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양양 역세권 투자선도지구(1425억원), 무릉별유천지 관광자원화(1200억원), 인제 역세권(798억원), 양구 역세권(754억

원), 목호항 재창조(521억원) 사업 등이 있다.

도내 신청 지역 가운데 횡성군, 양양군은 성장축진지역으로 분류돼 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100억원을 지원받는다. 동해시는 거점육성지역, 양구군과 인제군은 접경지역으로 분류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이날 김완섭(원

주)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바이오헬스 산업 고도화,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 등 미래산업,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통과와 도내 SOC 현안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 차관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지은·김덕형

▶ 관련 사진 2면

# 강원도민일보

2023 07 13 ( )

02



기재부 방문한 김 지사, 국비지원 요청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기획재정부를 방문, 원주 출신 김완섭 제2차관에게 강원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2023 07 13 ( )

02

# 강원도민일보

## 부동산 침체에 강원도 세수 비상... 지방세 1225억원 감소

<1-5월>

도내 아파트 거래 전년비 34% ↓  
주요 세입원 취득세 급감 직결  
국세 영향 교부세 삭감 불가피  
도 “세수 결손 여부 예측 불가”

	2023년 5월(A)	2022년 5월(B)	증감 (B-A)
합 계	8,563	9,788	△1,225
취득세	2,190	3,299	△1,109
등록면허세	218	210	8
라저세	3	3	-
지방소비세	5,520	5,550	△30
지역원시설세	72	51	21
지방교육세	527	639	△112
지년도	33	36	△3



속보=부동산 거래 절벽 심화로 올해 5월까지 누적된 강원도 지방세(본지 7월5일자 2면)는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225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동안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방세가 들어올 것을 가정하더라도 지방세 수입 평균이 최대 2400억원 이상 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강원 재정 공간상황이비상이다.

더욱이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보통 교부세 감소도 불가피해 강원도 세수 결손은 최대 4000여억원을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본지 취재 결과 올해 1-5월까지 걷힌

강원도 지방세는 총 85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225억원 (12.5%) 줄었다.

이같은 지방세 감소 폭은 아파트 거래 절벽으로 인한 취득세 급감이 견인했다. 세목별로 △취득세 -1109억원 △지방교육세 -112억원 △지방소비세 -30억원이 줄었다. 등록면허세와 지

역자원시설세는 각각 8억원·21억원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 5월까지 도내 아파트 거래량(전·월세 포함)은 9458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34%(3232건) 떨어졌다. 은행의 고금리로 인한 대출 부담과 함께 수도권 위주의 부동산 정책 등으로 강원지역 아

파트 매매거래량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 한국부동산원의 강원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 보면 지난 1월 매매거래량은 762호로 전년동월(1294호) 대비 532호(-41.11%) 급감했다. 이후 2월 -634호(-37.82%), 3월 -911호(-38.88%), 4월 -806호(-38.89%), 5월 -349호(-16.83%) 등 매달 감소세를 유지했다. 아파트 거래절벽은 그대로 부동산 취득세 급감으로 직결되고 있다.

강원도 재정 공간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올해, 강원도 전체 세수 결손은 최대 4000여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등비상이다.

도가 올해 연말까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 지방세는 총 2조 1571억원이다. 올해 5월까지 걷힌 8563억원을 기준으로, 남은 하반기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1조 546억원)으로

들어오더라도 2462억원이 부족하다. 이와 더불어 국가로부터 떼어 받는 강원도 몫 지방교부세 역시 최소 1200억~1300억원 줄어 들 것으로 예상돼 강원도 전체 세수 결손은 최대 4000여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민간연구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가 5월 기준 국세 수입 감소액(-36조 원)과 교부세 산정 기준 등을 고려한 지자체별 지방교부세 예상 감소액 발표 결과 도출된 수치다.

지방세 수입 감소 영향에 대해 김한수도 기획조정실장은 “부동산 경기 불황에 따른 (부동산)거래가 30% 넘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도 관계자는 “아파트와 같은 대형 건축물 임주가 하반기에 많이 예정돼 있어 세입 여건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세수 결손 여부는 현실에서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우진·김덕형

2023 07 13 ( )

02

# 강원도민일보

## 도, 미활용 도로재산 매각 “1200억원 확보 예상”

세수 감소 우려에 건축재정 기초 매각 예상액 연 1억원 이상 전망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건축재정 기초에 발맞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미활용 도로재산 매각에 나선다. 이와같은 조치로 도는 10년간 1200억원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도는 폐쇄로 인한 미활용 도로재산과 무단점유 추정재산 7300 필지에 대

해 현황조사를 실시해 매각·사용료 부과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도로재산 전수 실태 조사를 통해 이같은 미활용·무단점유 재산을 선별했다.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필지별 현황조사와 측량, 점유자 탐문 등을 추진한다.

도는 미활용 도로재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면 민간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선 점유자 조사 등을 통해

점유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미활용 도로재산 매각 예상액은 2033년까지 총 1200억원으로 추산됐다. 무단점유 재산 양성화에 따른 사용료는 연간 1억원 이상 견힐 것으로 전망됐다.

도 관계자는 “활용이 불가능한 도로 재산을 적극 매각하는 등 세수부족에 따른 건축재정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김덕형

2023 07 13 ( )  
04

# 강원도민일보

## 양양 포매리 주민 “마을 갈라놓는 동해북부선 노선 반대”

10m 이상 마을 관통 대책 촉구  
노선 관련 설명 없어 주민 반발  
교각 방안 변경 등 건의서 제출



양양군 현남면 포매리 조병일 이장이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로 인한 마을이 양분될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강릉에서 양양, 속초를 거쳐 고성 제진을 잇는 동해북부선 철도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노선을 놓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양양군 현남면 포매리 주민들은 동해북부선 철도 4공구 구간이 마을을 관통, 마을이 양분될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현재 마을을 지나는 구간이 10m 이상을 성토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포매리는 지난 동서고속도로 건설 당시 마을 입구가 왜가리 번식지라는 이유로 노선이 150m 가량 변경되면서 주택 10여채가 철거된 지역이다.

여기에 이번에 동해북부선 철도가

건설되면 또다시 주택 4채가 철거돼야 해 고속도로와 철도로 인해 마을이 사실상 ‘봉비박산’날 지경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번 동해북부선 철도사업을 진행하면서 국가철도공단 측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만 개최했을 뿐, 노선과 관련한 언급은 일체 없이 사업을 진행해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을 이와 관련한 내용의 건의서를 양양군을 통해 권익위와 국토부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병일 포매리 이장은 “철도와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당국이 주민에 대한 배려는 백로나 왜가리 만큼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노선을 바꿀 수 없다면 최소한 공법만이라도 ‘성토’가 아닌 ‘교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훈 choihoon@kado.net

江原日報

2023 07 13 ( )  
05

## 집중호우 2주새 4건 ‘싱크홀 주의보’

원주 개운동 폭 2m 깊이 2.8m  
강릉·속초·춘천서도 ‘땅 꺼짐’

강원지역에서 크고 작은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면서 지자체들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개운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발생한 싱크홀(폭 2m·깊이 2.8m)은 개인 배수 설비의 연결부 불량으로 우수가 지반으로 유입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시가 관리하는 우수 박스 마감부 벽체가 파손되면서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시는 주

변에 도보, 버스 정류장 등이 있어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13일부터 긴급 복구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도내에서는 집중호우가 시작된 최근 2주 새 싱크홀이 4건 발생했다. 지난 9일 강릉 포남동에서 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싱크홀(폭 6m·깊이 4m)이 생겼고, 지난달 28일과 29일에는 속초 영랑동, 춘천 효자동에서 굴착공사 부실 등으로 인한 싱크홀(깊이 1m)이 발생했다.

이번 원주 개운동 싱크홀은 강원자치도가 2018년부터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100번째 사고로 기록됐다. 2018년부터 이달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싱크홀을 시·군별로

보면 원주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릉 21건, 춘천 13건, 속초 9건, 삼척·양구 5건, 양양 4건, 고성 3건, 영월 2건, 철원·홍천 각 1건 등이었다.

싱크홀 발생 원인별로 보면 상수관 손상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수관 손상 20건, 다짐(되메우기) 불량 21건, 굴착공사 부실 11건, 상하수관 공사부실 5건 순이었다.

이진용 강원대 지질·지구물리학부 교수는 “도심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은 공사 부실 등으로 인한 ‘인재’가 대부분”이라며 “지자체가 전조 현상 모니터링, 관리 부실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mailto:peace@kwnews.co.kr)

## 강원도민일보

2023 07 13 ( )  
/ 19

## 삼척원전 재추진 안 된다

-건설 놓고 40년 갈등, 시민 반대 확인된 사업

정부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 전력수요 급증을 이유로 신규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척시 일대가 신규원전 부지로 또다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년 전 백지화로 결론이 난 사안인데, 다시 논의하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지역 여론입니다. 과거 삼척원전 추진과 반대, 폐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반복된 시련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가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는 지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24~2038년) 수립작업을 기존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이달 말 착수하고, 신규원전을 포함한 새로운 에너지 구성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창양 장관은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원전, 수소 등 새로운 공급여력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등 정부 주도 첨단산업 육성에 따라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신규원전 건설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을 공식화한 가운데 삼척시 일대가 원전 후보지로

거론돼 지역의 우려가 큼니다. 삼척은 지난 1980년대부터 원전 지정과 해제가 이어지면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민들은 개발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투자 위축으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1982년 근덕면 덕산리 일대가 원전 예정 후보지로 지정됐으나 시민들은 총궐기대회를 하며 반발, 1998년 지정 해제를 끌어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원전 추진 논란은 4년 후 2012년 9월 근덕면 부남·동막리 일대가 원전(대진원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며 다시 불붙었습니다. 시민은 문화제, 촛불집회, 궐기대회 등 반대 투쟁에 나섰고, 정부는 2019년 6월 대진원전 예정구역 지정 고시를 해제했습니다.

백지화로 마무리됐지만, 시민들의 심적 고통은 쉽게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주민 간 갈등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삼척 핵발전소 반대투쟁위와 근덕·노곡원전 반대투쟁위 등 시민들은 지난해 3월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삼척은 관광 분야 등 신산업을 통해 성장 동력을 만들 계획입니다. 동해북부선 철도 사업에 힘입어 물류 거점으로 발돋움하려고 있습니다. 원전 건설 문제로 지역역량을 허비할 여력이 없습니다.

## 강원도민일보

2023 07 13 ( )  
/ 19

## 문화원장 선거 개인명예 넘어서야

-변화하는 시대성 아우르는 활동 및 지역학 거점 책임 커

지역문화원장 선거와 관련해 임기를 고치는 등 행위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18개 문화원장 임기 만료일은 제각각 달라 매년 여러 곳에서 치러집니다. 원주와 홍천은 2022년 11월 문화원장 선거가 있었고 울들어 동해와 삼척, 7월 24일엔 강릉이 예정돼 있습니다. 12월 말에는 화천, 내년 초에는 속초 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특정한 이해관계와 밀접할만한 여지가 있어 구설에 오른 것입니다.

과거엔 문화원장을 현직 시장·군수가 낙점하거나 문화전문성과 관계없이 고위공무원과 지인을 앉히는 등 구태가 있었습니다. 회원 직선제로 바뀌었지만, 일부에선 이 점을 이용해 특정한 기간 문화원장직을 집중적으로 수감하며 유대를 쌓은 뒤 출마하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문화원은 문화교육과 활동거점이자 그 지역학 연구의 중추이며 문화원형을 발굴해 상품화와 콘텐츠 개발, 문화인력양성 등 다각적 기능을 하기엔 원장은 단순히 회원이 선출하는 의미로 국한할 수 없습니다.

삼척문화원의 경우 올 3월 김대화 원장이 이임하면서 장학기금 1억원을 기탁했습니다. 새로 취임한 최선도 원장은 오랫동안 이승휴 사상 선양과 준경묘·영경묘 가치 확장 등 다양한 활

동을 해온 점이 인정돼 큰 지지 속에 단독 후보로 취임했습니다. 반면 지난 6월 한 지역에서는 선거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현직 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화원에서 기존 2선 연임을 3선으로 변경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3선을 도입한 다른 문화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각의 오해 불식을 위해 적어도 현직은 적용돼서는 안 되며, 운영 강화에 필수적인지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관련 법제정과 지원조례를 통해 상근직 신분보장이 이뤄지면서 문화원 활동 확장성이 커졌지만 운영 성과는 원장과 사무국 직원 역량에 따라 심한 격차를 보입니다.

강릉문화원은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곳으로 성장했고, 동해문화원 역시 최근 다양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면 시군예산에 기대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답습하고 원장 개인 취향에 연연하는 곳도 있습니다. 문화원은 젊은세대 프로그램과 지역문화콘텐츠 거점으로 특성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원장은 명예직을 넘어서는 자리이기에 시대가 요구하는 비전이 분명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잡음이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 江原日報

2023 07 13 ( )

/ 19

## 150만명 붕괴 위기, '新공간전략'으로 대전환해야

강원특별자치도 내 인구수가 1년 새 6,000명 이상 감소하면서 2011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불과 3~4년 뒤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만명 붕괴마저 우려되고 있다. 그간 말로만 염려했던 '쪼그라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마침내 현실화한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인구, 사회, 경제 복합위기'다. 지난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분석한 결과, 올 6월 도내 주민등록인구 수는 153만2,617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년 만에 6,447명 줄어든 것으로, 2011년 6월(153만2,178명) 이

후 12년 만에 최저치다. 감소 폭도 2018년 12월 이후 가장 컸다. 도내 인구는 지난해 8월부터 11개월째 전월 대비 감소하고 있는데, 인구 월별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오랜 기간 역성장 중이다. 이는 강원지역에서 자연적으로 줄어든 인구(출생아-사망자) 규모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속 전략'을 전면적으로 다시 짜야 한다. 인구 감소는 인구 고령화로 연계돼 있다. 현재 강원자치도는 150만명 수준의 인구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인구 구조는 빠르게 초고령화로 치닫고 있다. 도내 65세 이상 고령자는 2020년 30만2,000명(20.0%)에서 2030년 47만명(30.9%)으로 늘어난다. 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13만명이 감소(-12%)한다.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라는 과도가 지역을 덮치고 있다. 우리에게 시간은 없다. 2030년까지 앞으로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모두가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에 따라 과거로부터 해 오던 관성을 끊고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

인구 감소 시대에 직면한 강원자치도는 신(新) 공간 전략으로 대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구 절벽 시대에 접어든 상황에서도 낙관적인 미래를 전망하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인프라를 공급하고 무질서하게 시가지를 확산하는 성장 위주의 지역 관리는

이제 지양해야 한다.

구조적인 악순환에 빠진 줄어드는 인구에 적합한 규모로 집약적인 생활거점을 형성해 도시를 안정화하고, 지역 간을 유기적으로 연계

## 강원자치도 인구수 1년 새 6,000명 이상 감소

## 시가지 확산하는 성장 위주 지역 관리 지양

## 도시기능 집약 생활거점 형성하는 것이 중요

해 생활서비스 유지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도시기능을 집약하는 생활거점 중심의 지역생활권에는 효율적인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재배치, 지역 간을 연계하는 교통시스템 구축, 지역 내 기존 유휴공간의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 즉, 생활거점으로 핵심 기능을 집약하게 되면 지역과 지역의 연계가 요구되고, 이를 위해 생활거점과 배후도시 간 교통 접근성이 제고돼야 한다. 타 지역에 비해 인구가 적고 고령인구가 많으며 기존 대중교통서비스의 운행 효율이 현저히 낮은 강원자치도의 군(郡)지역이나 농어촌지역의 경우 거점과 배후지역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 및 시범사업 운영이 절실하다.

## 江原日報

2023 07 13 ( )

/ 19

## 산사태 위험지역, 호우로 약해진 지반 철저한 관리를

호우특보가 발효된 도내 곳곳에서 도로·주택 침수, 맨홀·수목 안전 조치, 석축 붕괴 위험, 교통사고 등의 피해가 속출했다. 정선읍 세대 피암터널 구간에서는 산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급경사지(경사도 34도 이상)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다. 세대 피암터널 같은 급경사지가 도내에 3,000여곳에 달하고 이 중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39곳이다. 유사 사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위험지구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거 사고 발생지역을 중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18개 시·군에 수해 예방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관광객 및 아영객에 경보시설 활용 대피 유도, 산불 발생지역 산사태 예방 조치 및 담당 공무원 순찰 강화 등의 조치도 지시했다.

이번 장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15~16일)까지 내내 전국이 기압골과 정체전선 등의 영향을 받아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비는 남북으로 오르내릴 것으로 보고 지역별 강수 차이도 크다고 한다. 이미 물폭탄을 맞은 지반은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다. 장맛비가 계속되면 저지대 침수, 공사장·비탈면 붕괴, 산사태, 급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

이 중요하다. 정선군의 경우 지난 6, 7일 이틀간 1, 2차 산사태(3톤·1톤 규모)가 발생하자 도로 통행을 제한, 9일 300톤 규모의 산사태가 났을 때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지역 주민들 역시 긴급 재난 문자와 야간에도 재난 방송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피할 때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해야 하며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려 오거나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는 등 산사태 위험 징후가 있진 않은지 잘 살펴야 한다.

매년 발생하는 비 피해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바로 철저한 대비다. 지금은 재난 대비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때다. 하천 진입로·산사태 및 침수 우려지역과 같은 위험지역을 미리 점검하고 출입을 차단해 인명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지반이 약해진 급경사지 등에 대해서는 붕괴·산사태 위험이 높아진 만큼 사전 예찰·대피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다. 기후변화로 지역별로 집중 폭우 등은 이미 예견돼 왔다. 이에 대한 재난 상황 대비에 소홀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 봐야 한다. 불가항력적인 천재라고 해도 대처만 잘한다면 피해는 줄일 수 있다. 방심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진다. 사소한 부주의가 돌아킬 수 없는 엄청난 사고로 직결됐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